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요구

제 목 ○○○○ 진입로 데크로드 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2019. 12. 17.부터 2020. 6. 10.까지 ○○면 ○○리 산○○-○○번지 일원에 사업비 1,381백만원을 투입하여 ‘○○ ○○ ○○○○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공사’(이하 ‘○○○○ 진입로 데크공사’라고 한다)를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¹⁾ 제5조의2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²⁾ 제9조의3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로 정하고 있다.

1) 법률 제14526호, 2017.1.17. 법률 제173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 대통령령 제30077호, 2019. 9. 17. 대통령령 제314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 하는 MAS 2단계경쟁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2단계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안되며, 같은 기준 제1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따라서 ○○군 ○○○에서는 ‘○○○○ 진입로 데크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중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면서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구매절차를 진행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여야 하고, 부작위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공정한 계약절차 없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도록 하거나 이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에서는 2019. 10. 21. ○○○○ 진입로 데크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공문 및 과업지시서에 데크로드 설치공사의 사업계획을 L=850m인 것으로 계획하였음에도 2019. 11. 27. 완료된 실시설계에서는 사업계획 L=847.2m 중 76m 제외한 L=771.2m에 대해서만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데크로드의 경사도를 약 10%로 계획하여 대상구간 전체에 대해 논슬립 패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급자재인 ‘목재○○’의 구입수량을 1,643m²으로 하고, 구입금액을 98,500천원으로 확정하여 설계 당시부터 계획

되어 있던 (주)○○○○(○○소재)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2020. 1. 17. 발주금액 98,500,000원의 99%에 해당하는 98,284,260원에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준공 직전인 2020. 4. 10. 도급자인 (주)○○(○○○ 소재)로부터 실정보고를 받아 ① 데크로드의 종단경사가 약 10%에 해당하여 동절기 눈·비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예상되어 계단 설치가 할 필요하고, ② 데크 미설치 구간 L=76m 중 보행 동선의 연결이 용이하지 않은 구간에 민원이 예상된다는 사유 등으로 2020. 4. 16. 1차 설계변경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데크로드의 경사도를 제한하는 기준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건설기준인 「보도포장 KDS 34 60 10, 2016. 6. 30.」에 따르면, 보도포장의 기울기를 8%로 제한하고 있고, 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5%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곳에 데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눈·비 등 강우에 대비할 수 있는 경사도와 보행 동선의 연결 여부 등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시공단계에 와서야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누락된 채, 2019. 12. 17. 공사가 착공되었고, 준공예정일을 하루 앞둔 같은 해 2020. 4. 16.이 되어서야 도급사의 실정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인지하여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설계변경 과정에서 ‘○○○○’의 수량이 [표1]과 같이 112㎡ 추가되면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금액인 1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2020. 6. 1. 보행동선 연결을 위한 데크로드와 계단 설치를 위해 ‘○○○○’ 186㎡를 추가 반영한 제2차 설계변경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절차 없이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주)○○○○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17,880,000원을 추가 계약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게 되

있고, 사업 계획단계에서 강우나 지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하여 구매금액의 최대 10%인 11,679,000원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업무를 태만히 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관급자재 변경구입 내역

(단위 : m², 원)

사업명	당초계약내역		최종계약내역		증감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 ○○○○ 진입로 데크로드공사	1,643	98,284,260	1,941	116,164,260	298	17,880,000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에서는 ‘○○ ○○○○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공사’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사업계획을 당초 L=850m로 계획하였으나, 계획구간 중 76m를 제외하고 공사를 발주한 사유는 ‘○○ ○○○○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차량 회차로 2개소를 신설 예정으로 향후 철거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위 L=76m 구간을 제외하고 발주하였고 공사 시 보행 동선의 연결이 용이하지 않아 민원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추가 설치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 ○○○의 의견과 같이 차량회차로로 인한 철거 우려 등으로 제외된 구간에 불가피하게 추가 설치한 데크 물량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사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설치된 계단 등에 110m² 가량 ‘○○○○’이 추가 계약된 것을 볼 때 사업 계획단계에서 강우나 지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통하여 ○○○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차량회차로 구간에 시행한 추가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로 볼 수 없고, 만약 민원발생 등을 사유로 보행 동선의 연결이 용이하지 않아 추가공사가 필요하였다면 이를 별도로 발주

하여 계약한 뒤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업무의 적당 편의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공사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기존 관급자재 계약업체는 추가물량을 계약하여 부당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의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는

‘○○○○ 진입로 테크로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게 한 실무책임자 ○○○ 지방○○○○ ○○○, 지방○○○○ ○○○, 실무담당자 ○○○ 지방○○○○ ○○○(현 ○○○○○)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등 법정민원 처리 지연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함)에 따라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수리 및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승인 등의 법정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관리기

관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련 법규의 인가·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 ○○○○○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3일 이내,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신청은 5일 이내(5일 이내 연장 가능)로 하고, 보완기간은 행정청에 도달한 날까지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하여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에서는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신청을 승인하면서

새울 민원처리시스템에서 보완요구 일수를 신청인(기업체)이 실제 제출한 보완 완료일 보다 길게 입력·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지연시켜 【표 1】과 같이 보완 후 처리기한보다 2 ~ 7일을 초과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2019. 5. 23. 접수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하면서 신청인(기업체)에게 관계법령등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처분 절차 완료 후 완료신고”토록 보완 요구하여 【표 1】과 같이 당초 처리기한보다 15일 초과하여 지연 처리함으로써 신청인이 신속·공정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하였다.

【표 1】 공장설립등 관련 법정민원 처리 지연 현황

민원명	접수 번호	접수일 ①	당초 처리기한 (처리기간) ②	보완일수 적용		보완 후 정당 처리기한 ④=②+③	처리일자	초과 일수	비고
				시스템	실제 ③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	○○○	19. 3. 28.	19. 4. 4. (5일)	9	5	19. 4.11.	19. 4.15.	2	
	□□□	19. 3. 28.	19. 4. 4. (5일)	9	5	19. 4.11.	19. 4.22.	7	
	≡≡≡	19. 8. 20.	19. 8.27. (5일)	42	41	19.10.28.	19.10.31.	3	
공장설립 등의완료 신고	ㄸㄸㄸㄸ	19. 5. 23.	20. 5.27. (3일)	15	15	19. 6.18.	19. 6.18.	15	근거 없음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담당자들의 업무 연찬 기간이 부족했고,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 상태에서 민원시스템 업무 미숙 등으로 처리기한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는

- ① 근거 없는 보완 요구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법정민원을 지연·처리한 실무 담당자 ○○○○○ 지방○○○○ ○○○(현 ○○○)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근거 없는 보완 요구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법정민원 지연·처리에 책임이 있는 실무책임자 ○○○○○ 지방○○○○ ○○○(현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법정민원을 지연·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③ 소속 공무원들이 「산업집적법」 관련 법정민원 처리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 요구

제 목 정보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에 따라 군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개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제6조의2¹⁾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한

1) 법률 제176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22부터 시행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정보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으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인용, 기각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표 1】 과 같이 3건에 대하여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는데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권한이 없는 처리부서에서 각하, 부분인용 여부를 임의로 처리를 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저해하였고, 청구인이 심의회를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현황

접수번호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처리부서	비고
	접수일	결정사항	신청일	통지일	결정사항		
-----	18.12.13.	부분공개	19. 1. 5.	19. 1.15.	인용(부존재)	○○읍	
++++++	20. 7.14.	부분공개	20. 8.27.	20. 9. 8.	각하	○○○○○	
*****	20.12. 8.	비공개	20.12.23.	21. 1. 4.	부분인용	○○○○○	

출처) ○○○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에서는 2018. 12. 13. 농지원부, 직불금 수령 여부, 용도지역 변경

과정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직불금 수령 여부와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농지원부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이 2019. 1. 5.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였는바, 해당 정보는 당초부터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정보인데도 정보의 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공개로 결정·통지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이의신청을 유발시키게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였고, 당초 정보의 부존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통지함으로써 청구인의 불필요한 이의신청을 유발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면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정보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는

- ① 정보의 존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보 비공개 결정 및 통지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 결정 통지한 실무담당자 ○○○○○ 지방○○○○ ○○○, 실무담당자 ○○○○○ 지방○○○○ ○○○(현 ○○○)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회에 한해 엄중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② 소속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청구 관련 업무 추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 보

제 목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미이행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대지나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그 이행을 위한 시정 명령을 하도록 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최초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 표제부(제1호 서식),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제3호 서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제5호 서식) 및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제7호 서식)에 ‘위반건축물’임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시하는 것은 위반건축물임을 알지 못하고 건축물을 매수하거나 분양받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건축물 사용이

제한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최초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시하여 건축물 매수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에서는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표 1]의 기재와 같이 24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서도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임을 기재를 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표 1] 위반건축물 미표시 현황(2019. 1. 1. ~ 2020. 12. 31.)

연번	행위자	위치	위반일	시정명령일	비 고
1			19.01.04.	19.02.21.	
2			19.01.31.	19.02.11.	
3			19.03.06.	19.03.08.	
4			19.03.15.	19.03.07	
5			19.03.22.	19.03.21.	
6			19.03.22.	19.03.25.	
7			19.04.02.	19.04.02.	
8			19.12.23.	19.12.23.	
9			20.03.25.	20.03.30.	
10			20.08.28.	20.08.28.	
11			20.09.14.	20.09.15.	
12			20.09.13.	20.09.15.	
13			20.09.24.	20.09.24.	
14			20.09.24.	20.09.25.	
15			20.09.23.	20.09.23.	
16			20.08.23.	20.08.27.	

연번	행위자	위치	위반일	시정명령일	비 고
17			20.10.06.	20.10.06.	
18			20.10.06.	20.10..21.	
19			20.10.06.	20.10.21.	
20			20.10.22.	20.10.22.	
21			20.10.12.	20.10.27.	
22			20.10.12.	20.10.27.	
23			20.11.06.	20.11.08.	
24			20.04.23.	20.04.23.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미이행 된 24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산적한 업무 등으로 일부 지연되었고, 감사 이후 추후 바로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관련자에 대해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오니 금회에 한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와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24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 요구

제 목 지방하천구역 내 공사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 등 9개 부서에서는 2019. 1. 1. ~ 2020. 12. 31.까지 지방하천구역에서 총 21건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성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를 할 경우에도 하천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서는 「하천법」 제30조와 제33조에 대한 사무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권한은 위임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도 ○○○○○(현, ○○○○○)에서는 2018. 1. 12. ‘지방하천 유지관리 관련 업무처리 개선계획’¹⁾을 각 시·군에 통보하여 “「하천법」 제6조에 도 불구하고 권한의 남용과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가 처리 되도록 당부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지방하천구역 내에서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도와 협의하여야 하고,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 등 9개 부서에서는 ○○○ 관내 지방하천구역 내에서 [표 1]과 같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하천관리청인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기존의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여 하천관리청인 ○○○○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표1] ○○○도 협의 없이 지방하천구역 내 공사를 시행한 내역

구분	공 사 명	지방하천명	시행부서	비고
계	15건			
1	○○○○ ○○ ○○○○ 조성사업	○○천	○○○○○○	
2	○○○○ ○○공사	○○천	○○○○○○	
3	○○○○ ○○○○	○○천	○○○○○○	

1) ○○○○○-546호

4	○○ ○○○○ ○○공사	○○천	○○○	
5	○○천 ○○○○사업	○○천	○○○○○	
6	○○○○○○○사업	○○천	○○○○○	설계변경
7	○○지구 ○○○○○○사업	○○천	○○○○○	
8	○○천 ○○○○사업	○○천	○○○○○	
9	○○지구 ○○○○○○사업	○○천	○○○○○	
10	○○교 ○○○○공사	○○천	○○○○○	
11	○○면~○○마을 ○○○○○○공사	○○천	○○○○○	
12	○○면 ○○○○ ○○ 사업	○○천	○○○○○	
13	○○ ○○○○○○ ○○공사	○○천	○○○○○	
14	○○ ○○○○○○ ○○ ○○공사	○○천	○○○○○	
15	○○○○○○○ ○○사업	○○천	○○○○○	

관계기관 의견

○○○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하천법」과 지방하천유지관리 관련 업무처리 개선계획에 따라 ○○○○도와 사전협의 후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는

지방하천 구역 내 하천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인 ○○○○도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 보

제 목 법제처 권고 「필수조례」 제·개정 정비 미이행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개별법에서도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개선, 주민불편 해소, 부담완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자치

입법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개정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에서는 법제처가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공문으로 통보 받거나, ○○○도 ○○○○○에서 2019. 5. 7. 및 2020. 6. 22. ○○○ ○○○○○ 관에 공문을 통해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²⁾을 공문으로 통보 받은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조례를 제·개정토록 시행하였다.

그런데 ○○○ ○○○○○에서는 ○○○○부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개정을 위한 입안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 소속 4개 부서에서 총 11개의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조속히 행정 절차를 거쳐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고,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도 ○○○○○-4328(2019. 5. 3.) 및 -5570호(2020. 6. 22.)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

조치할 사항 ○○○○는

법제처 권고 법령 위임「필수조례」를 조속히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 보

제 목 민원처리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시스템 등으로 신청된 민원을 ○○○○○에서 내용에 맞게 분류·접수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면 지정된 담당부서에서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처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질의 민원은 14일, 법령 외의 질의민원은 7일, 건의민원은 14일, 고충민원은 7일 ~ 28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는 각종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법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하되, 그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각 부서에서는 2019.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총 34건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기한 보다 최소 2일에서 최대 17일을 넘겨 지연 처리한 바 있고, [별지 2]와 같이 13건의 민원은 담당 지정을 지연하여 민원처리기한을 초과하여 민원을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업무 미숙과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부족, 담당자 지정 지연 등으로 민원처리기한을 초과하였고, 추후 관련법의 지속적인 연찬과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소극행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시설부대비(공사감독 피복비)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해당부서)
조 치 기 관 ○○○(해당부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 등 7개 부서와 ○○○○사업소 등 2개 사업소 및 12개 읍면(이하 ‘○○○ 각 부서 등’이라 함)에서는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시설부대비로 총 102건, 76,881천원을 공사감독 피복비 명목으로 집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회계법」 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401-03)를 현장감독공무원 피복비 등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고,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 및 입회자 등에게는 여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칙 및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공사기간³⁾,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⁴⁾, 가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 하도록 해야 하며, 고가의 등산용품 등은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 대리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 각 부서 등에서는 시설부대비를 현장 감독공무원의 피복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우선 구매하여 지급하되, 고가의 등산복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시설부대비 예산을 본인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또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이익이 추구되는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 등 21개 부서에서는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시설부대비로 총 102건, 76,881천원을 공사감독공무원의 피복비로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4) 공사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

가. 현장 공사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피복비 지급 부적정

○○○ ○○○ 등 9개 부서에서는 시설부대비를 집행하면서 현장 공사감독공무원이 아닌 준공검사자, 용역감독 등에게 [표 1]과 같이 부적정하게 시설부대비(피복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1] 현장공사감독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자		공사감독		비고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총계	18건		10,610					
1	○○○	2020.08.11	225					준공검사자
2	○○○	2020.12.07	500					준공검사자
3	○○○	2019.11.28	687					용역감독
4	○○○	2020.08.10	405					용역감독
5	○○○	2020.12.08	750					용역감독
6	○○○	2020.08.31	230					용역감독
7	○○○	2020.05.14	200					실무책임자
8	○○○	2020.06.22	807					용역감독
9	○○○	2020.12.10	574					용역감독
10	○○면	2019.05.10	500					용역감독
11	○○면	2020.02.06	500					용역감독
12	○○면	2020.05.08	700					용역감독
13	○○면	2019.04.16	207					실무담당자
14	○○면	2019.11.15.	975					실무책임자
15	○○사업소	2019.01.25	700					용역감독
16	○○사업소	2019.01.25	350					계획단계구입 공사감독수행
			350					
17	○○사업소	2020.03.26.	650					현장지도공무원 준공검사자
18	○○사업소	2020.03.26.	650					실무담당자
			650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나. 공사종료 이후에 피복비 지급 부적정

○○○ ○○면 등 3개 부서에서는 공사 준공일이나 준공 직전에는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사실상 공사종료 직전으로써 현장감독 업무수행을 위한 피복비를 공사감독에게 지급해야 할 합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2]와 같이 부당하게 시설부대비로 피복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공사종료 이후에 피복비 지급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자		공사감독		비고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총계	3건		2,686					
1	○○면	2020.11.25.	900					공사이후
2	○○면	2020.08.03.	1,200					공사이후
3	○○사업소	2019.05.09.	586					공사이후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다. 보조감독자 임명 등을 통한 피복비 부당지급

○○○ 각 부서 등에서는 시설부대비를 집행하면서 복수의 공사감독 임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기술직 직원의 현장감독업무를 보조한다는 명분으로 [표3]와 같이 복수의 공사감독을 임명하거나, 보조감독, 현장지도공무원 등으로 임명한 다음 피복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현장지도 및 보조감독을 임명하여 지급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지급일자	지급금액	보조,지도 공무원		공사감독		비고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총계	15건		7,404					
1	○○면	2019.11.18.	490					보조감독
2	○○면	2020.08.16.	485					보조감독
3	○○읍	2019.12.03	750					현장지도공무원

구분	실과명	지급일자	지급금액	보조,지도 공무원		공사감독		비고
				직급	성명	직급	성명	
4	○○읍	2020.10.07	800					현장지도공무원
5	○○면	2019.05.23.	495					현장지도공무원
6	○○면	2019.10.01	498					보조감독
7	○○면	2020.08.05.	15					현장지도공무원
8	○○면	2020.10.18.	498					현장지도공무원
9	○○면	2020.04.10.	513					보조감독
10	○○면	2020.02.27.	500					보조감독
11	○○면	2020.06.26.	300					보조감독
12	○○면	2019.04.25.	600					보조감독
13	○○면	2019.11.08	600					보조감독
14	○○면	2019.12.26.	750					보조감독
15	○○면	2020.09.04	110					보조감독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라.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 절차 없이 관내 업체를 통하여 고가의 등산복 구입

○○○ ○○○ 등 21개 부서에서는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시설부대비로 총 102건, 76,881천원을 공사감독 피복비로 집행하면서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중 93.1%에 해당하는 95건 총 75,906천원을 관내 등산복 판매업체를 통하여 고가의 등산복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보조감독자 임명 등을 통하여 피복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 ○○○, ○○○, ○○○, ○○○, ○○○, ○○○, ○○○, ○○○, ○○○에서는 개발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등 기술직원이 감독하는 사업 현장이 많아 기술직원들의 현장감독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감독 공무원 등을 임명하였고, 감독공무원에 보조감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설부대비 집행기준의 해석을 달리하여 혼선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 시설부대비를 피복비로 집행한 내역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 ○○○○○, ○○○, ○○○에서는 공사종료 이후에 피복비가 지급된 점에 대하여 시설부대비 집행기준에 대한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으며,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는

① 시설부대비를 피복비로 집행함에 있어 공사종료 이후 또는 현장 공사감독이 아닌자 및 보조감독 등을 임명하여 시설부대비(피복비)를 집행하고,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 절차없이 관내 업체를 통하여 고가의 등산복을 구입하는 등 시설부대비(피복비) 집행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한 기관 전체의 주의·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관 경고**” 처분하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설부대비(피복비) 집행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② 공사종료 이후 또는 현장 공사감독이 아닌 자 및 보조감독자 임명을 통하여 시설부대비를 부적절하게 지급받은 실무책임자 ○○○ 지방○○○○ ○○○(현 ○○○), 실무담당자 ○○○○○ 지방○○○○ ○○○(현 ○○○), ○○○○○ ○ 지방○○○○○○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 실무책임자 ○○○○○ 지방○○○○ ○○○, ○○○ 지방○○○○ ○○○, ○○○ 지방○○○○ ○○○, ○○○ 지방○○○○ ○○○(현 ○○○○○), ○○○ 지방○○○○ ○○○, ○○○ 지방○○○○ ○○○(현 ○○○○○), ○○○ 지방○○○○ ○○○(현 ○○○○○),

○○○ 지방○○○○ ○○○(현 ○○○○○), ○○○ 지방○○○○ ○○○(현
○○○○○), 실무담당자 ○○○ 지방○○○○ ○○○, ○○○ 지방○○○○
○○○, ○○○ 지방○○○○ ○○○, ○○○ 지방○○○○ ○○○(현 ○○○
○○), ○○○○○ 지방○○○○ ○○○(현 ○○○), ○○○○○ 지방○○○○
○○○(현 ○○○), ○○○ 지방○○○○ ○○○(현 ○○○○○), ○○○ 지방
○○○○ ○○○(현 ○○○○○), ○○○ 지방○○○○ ○○○(현 ○○○), ○
○○ 지방○○○○ ○○○(현 ○○○), ○○○ 지방○○○○ ○○○(현 ○○○
○○), ○○○ 지방○○○○ ○○○(현 ○○○○○), ○○○ 지방○○○○ ○○
○(현 ○○○), ○○○ 지방○○○○ ○○○(현 ○○○○○), ○○○ 지방○○
○○ ○○○(현 ○○○○○), ○○○ 지방○○○○ ○○○에 대하여는 「경상
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시정 요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 및 이행보증금 예치 업무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와 ○○○(이하 “○○○○○○○ 등”이라 한다.)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조정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과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며,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에 따르면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등이 크게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경비를 제외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와 조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예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 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보증서(보험의 보증기간은 허가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이어야 한다)를 예치하게 한 후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 ○○○○○○ 등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한 후,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 지속적으로 허가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 등에서는 [표 1]과 같이 2019년에는 186건 3,518,389천 원, 2020년에는 273건 12,752,383천 원의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개발행위허가 준공 이후 반환하면서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을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하는데도, [표 2]와 같이 이를 초과하여 2019년에는 9건 2,345,145천 원, 2020년에는 1건 3,020천 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였다.

[표 1] 2019~2020년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납입 및 반환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납입	합계	459	16,270,772	186	3,518,389	273	12,752,383	
	○○○○○○○	353	14,045,602	137	2,519,421	216	11,526,181	
	○○○	106	2,225,170	49	998,968	57	1,226,202	
반환	합계	256	5,230,711	81	1,530,994	175	3,699,717	
	○○○○○○○	193	3,847,855	44	707,230	149	3,140,625	
	○○○	63	1,382,856	37	823,764	26	559,092	

※ ○○○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2019~2020년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기준초과 예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준 초과 예치	합계	10	2,348,165	9	2,345,145	1	3,020	
	○○○○○○○	6	2,329,338	5	2,326,318	1	3,020	
	○○○	4	18,827	4	18,827	-	-	

※ ○○○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한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허가자로부터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절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데도, [표 3]과 같이 감사일 현재 2019년에 허가한 7건, 2020년에 허가한 6건의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2019년에 허가한 10건, 2020년에 허가한 2건의 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의 기간연장 및 이행보증금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표 3] 2019~2020년 개발행위허가기간 및 이행보증금 보증기간 만료 미조치 현황

구분		합계(건)	2019년	2020년	비고
허가 기간 만료	합계	13	7	6	
	○○○○○○○	9	5	4	
	○○○	4	2	2	
보증 기간 만료	합계	12	10	2	
	○○○○○○○	11	9	2	
	○○○	1	1	-	

※ ○○○ 제출자료 재구성

이 밖에도 ○○○ ○○○○○○○ 등에서는 [표 4]~[표 6]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다시 예치하지 않고 준공처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개발행위허가 후 즉시 예치하여야 하는데도 허가 후 지연하여 예치하였으며,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개발행위허가 종료일부터 6개월 가산하여 예치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4] 2019~2020년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보증기간 만료 후 준공처리 현황

구분		합계(건)	2019년	2020년	비고
보증기간 만료 후 준공처리	합계	2	-	2	
	○○○○○○○	2	-	2	
	○○○	-	-	-	

※ ○○○ 제출자료 재구성

[표 5] 2019~2020년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지연 현황

구분		합계(건)	2019년	2020년	비고
예치지연	합계	22	20	2	
	○○○○○○○	15	13	2	
	○○○	7	7	-	

※ ○○○ 제출자료 재구성

[표 6] 2019~2020년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보증기간 기준초과·미달 현황

구분		합계(건)	2019년	2020년	비고
보증기간 만료 후 준공처리	합계	4	-	4	
	○○○○○○○	-	-	-	
	○○○	4	-	4	

※ ○○○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실무담당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① 개발행위허가와 이행보증금 예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 지방○○○○ ○○○(현 ○○○○○○), 지방○○○○ ○○○(현 ○○○○○○), 지방○○○○ ○○○(현 ○○○○○○), 지방○○○○ ○○○, 지방○○○○ ○○○, ○○○ 지방○○○○ ○○○(현 ○○○○○○), 지방○○○○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 지방○○○○ ○○○(현 ○○○○○○), 지방○○○○ ○○○, ○○○ 지방○○○○ ○○○(현 ○○○○○○)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주의)

② 아울러 ○○○ ○○○○○○○와 ○○○에서 초과 예치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10건 2,348백만 원은 적정 예치금액으로 다시 산출하여 예치하고, 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부적정하게 된 4건에 대해 적정 보증기간이 되도록 조치하고, 개발행위허가기간이 만료된 13건 및 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만료된 12건은 기간연장 및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통보 요구

제 목 시설부대비(공사감독 피복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 ○○○○○, ○○○ 등 3개 부서(이하 ‘○○○ 각 부서 등’이라 함)에서는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시설부대비로 총 5건, 2,868천 원을 공사감독 피복비 명목으로 집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401-03)를 현장감독공무원 피복비 등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고,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 및 입회자 등에게는 여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및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공사기간(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공사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가의 등산용품 등은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 대리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 각 부서 등에서는 시설부대비를 현장 공사감독 공무원의 피복비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사기간 내에 현장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 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달청을 통하여 우선 구매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고가의 등산복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시설부대비 예산을 본인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또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각 부서 등에서는 시설부대비로 총 3건, 1,668천 원을 공사감독

공무원의 피복비를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결과 예산을 낭비하여 재정상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 현장 공사감독공무원이 아닌 자 및 공사준공 후 피복비 부담 지급

○○○ 각 부서 등에서는 [표 1]과 같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현장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자와 해당 공사의 준공일 이후 피복비를 지급하는 등 시설부대비 (피복비) 1,668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1] 현장공사감독이 아닌 자와 준공일 이후 피복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지급일자	준공일자	지급액	부당지급		공사감독		비고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총계	3건			1,668					
1	○○○○○ ¹⁾	2019.11.13	2019.12.14	468					용역사업 지급 용역사업 지급
2	○○○○○ ²⁾	2019.11.28	2019.11.26	600					준공후지급 준공후지급
3	○○○ ³⁾	2019.12. 9	2019.12. 3 2019.12. 2 2019.12.16	600					준공후지급 준공후지급 -

※ ○○○ 제출자료 재구성

나. 관내 업체를 통한 고가의 등산복 구입

○○○ 각 부서 등에서는 시설부대비로 총 5건, 2,868천 원의 피복비를 집행 하면서, 조달청을 통한 우선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내 등산복 판매업체⁴⁾에서 고가의 등산복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1) ○○○○○ : ○○○○년 ○○○사업 준공일(2019.12.14. / 용역사업임)
 2) ○○○○○ : ○○○○○○ 외 ○개소 보수공사 준공일(2019.11.26.)
 3) ○○○ : ○○○○년 ○○○ ○○○○사업 준공일(2019.12. 3.), ○○○○년 ○○○ ○○○○사업 (전기) 준공일(2019.12. 2.), ○○○○년 ○○○ ○○○○사업 (소방) 준공일(2019.12.16.)
 4) ○○○○○, ○○○, ○○○○○

[표 2] 공사감독자 지급 피복비 구매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지급일자	준공일자	지급액 (천원)	구입처	지급자	
총계	5건				2,868		직급	성명
1	○○○○○		2019.11.13	2019.12.14	468			
2	○○○○○		2019.11.28	2019.12.17	300			
			2019.11.28	2019.12.13	300			
3	○○○○○		2019.11.28	2019.11.26	600			
4	○○○		2019.12. 9	2019.12.16	300			
5	○○○		2019.12. 9	2019.12. 3	300			
			2019.12. 9	2019.12. 2	300			
			2019.12. 9	2019.12.16	300			

※ ○○○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에서는 「○○○○년 ○○○○사업」은 과업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도로 측량과 탐사기기를 사용하여 지하(하수·상수도)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으로 현장 업무가 대부분이며, 야외 현장에서 안전점검과 정확한 탐사가 이루어지는 지를 과업기간 동안 상시 현장 감독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피복을 구입하여 실제 착용하여 현장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은 현장 업무 위주로 이루어지는 용역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설부대비에 명시된 감독 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현장감독공무원에게 피복비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에서는 “○○ ○○○○ 시설물 보수공사”, “○○○○ 유지보수공사”건은 공사기간 내 피복비를 집행하였으나, 조달청 구매와 관련한 규정

및 구매 절차 등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의견과 함께 “○○○○○ ○○ 외 2개소 보수공사”의 공사기간은 2019. 10. 21. ~ 2019. 12. 19.이고, 준공검사일자는 2019. 12. 6.인데, 피복구입은 공사기간 중인 2019. 11. 22. 계약체결하고 피복을 수령하였으나, 준공계 접수일인 2019. 11. 26. 이후 2019. 11. 28.에 피복비 지출이 집행하였고, 위 시설부대비는 단위사업 [○○시설 물 유지관리] 시설부대비로서 피복구입 기간 내 상기 공사감독 외에도 “○○○ ○ ○○○ 개선사업(2019. 10. 28.~2020. 6. 24.)”, “○○○○○ ○○ ○○○○ ○○ ○ 개선사업(2019. 10. 16.~2019. 12. 2.)”등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 절차를 알지 못하여 기존 방식으로 관내 업체를 통해 피복을 구매한 바,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기준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에서는 2021년 적극행정 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내 시설부대비를 활용한 피복비 집행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과 구매 절차 등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공사기간 이후의 피복비 집행 및 견적에 의한 관내 등산복 판매업체를 통한 구입 등 업무처리 하였으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 지식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끼며, 향후 업무 추진시 업무연찬을 통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기준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설부대비의 피복비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며, 피복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사기간(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공사현장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사감독관” 이란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에서는 「○○○ ○년 ○○○○사업」 용역사업의 감독공무원으로 피복비를 지급받아 현장에서 감

독을 수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용역사업의 감독공무원의 업무범위는 “공사감독관”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 ○○ 외 2개소 보수공사”는 2019. 11. 26. 공사 준공계가 접수 되었으며, ○○○○○의 피복비 지출서류에 납품일은 2019. 11. 28.로 되어 있어, ○○○○○에서 납품일이 2019. 11. 22.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2019년 ○○○ ○○○○○ 합본예산서상 [○○○○○○ 유지관리]는 단위사업이며, 세부사업⁵⁾으로 ① [○○○○○ ○○○ 개선사업], ② [○○○○○ ○○○ 개선사업], ③ [○○시설물 (AA,BB,CCC도,기타 등) 유지관리]이 있는데, ①,②에는 시설부대비 (피복비)가 없으며, ③에는 시설부대비(피복비)가 있지만, ①,② 세부사업 공사를 하는데 ③의 세부사업 예산으로 시설부대비(피복비)를 지급하여 감독하였다는 ○○○○○의 의견은 세출예산의 집행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은

① 시설부대비로 공사 감독 피복비를 집행하면서 조달청을 통한 우선 구매를 하여야 하는데도, 고가의 관내 등산용품 업체에서 공사감독 피복을 구매하였으며, 용역사업 감독공무원 등 현장 공사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와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계가 접수된 후 피복비를 지급하는 등 시설부대비(공사감독 피복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실무책임자 ○○○○○ 지방○○○○ ○○○(현 ○○○○○), 실무담당자 ○○○○○ 지방○○○○ ○○○(현 ○○○), ○○○○○ 지방○○○○ ○○○○, ○○○ 지방○○○○ ○○○(현 ○○○), ○○○○○ 지방○○○○ ○○○(현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공사감독 피복비를 지급함에 있어 공사기간을 감안하고

5) ① “○○○○○○ ○○사업”(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② “○○ ○○ ○○○ ○○○사업”(국비 지원사업), ③ “○○○ ○○ 외 2개소 보수공사”(○○○비)

공사감독 피복의 실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공사현장 감독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해당 공사의 기간 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종료되었거나 준공일이 임박하여 사실상 공사감독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준공일 직전 등에 시설부대비를 피복비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복비를 구입할 때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를 먼저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설부대비(피복비) 집행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 요구

제 목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사후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을 상대로 한 소송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담당과장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판결금의 지급, 패소의 원인이 법령·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건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2018. 5. 31. ○○○외 1명(이하 ‘원고’라 한다)은 ○○○ ○○○ ○○○ 마을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원고 소유의 ○○○ ○○○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도로포장 및 매설 상하수관을 철거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 ○. ○○. ○○○에 대해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도로포장 및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관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 ○. ○○.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 ○○○○○○에서는 2019. 5. 27. 이 사건 토지에 상하수도관 매설로 인해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관을 제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으로 ○○○○○, 수도과, 하수과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¹⁾

그런데 ○○○ 관련부서에서는 판결결과를 통보받고도 해당마을 이장이 “마을길 사용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해 보겠다”는 제안만 믿고, 원고와의 협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송결과 이행을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고, ○○○○. ○. ○○. 에는 원고로부터 판결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받는 등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 ○○. 확정판결에 따른 도로포장 및 상하수관 철거 관련 현장확인 결과 도로철거 시 ○○○ ○○○ 제조장인 ○○○○○의 제품 상하차 진출입의 어려움으로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원고와 합의해 보겠다는 해당마을 이장의 구두의견과 ○○○에서 철거의 불가피성을 통보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여러차례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 대표가 원고와 진입로 사용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움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원만한 합의 시까

1) ○○○○○○-3695(2019.5.27.)

지 행정집행을 보류하였고, 이후 관련된 별도의 민원 또는 건의가 없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원고와의 협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사유재산 소유권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 ○○○○○, ○○○, ○○○에서는 ○○○○○○○으로부터 ○○○○○. ○. ○○. 민사소송 결과를 통보받고 조치를 취하려고 한 점은 인정되나, 권한도 없는 해당마을 이장의 말만에 의존하여 원고와의 협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송결과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로부터 판결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받는 등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 ① 패소 확정된 사건에 대한 사후처리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 지방○○○○ ○○○(현 ○○○○○)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라며, (주의)
- ② 아울러 소송사무 사후처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 보

제 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업무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와 ○○○(이하 “○○○ 등”이라 한다.)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대지나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표시 등의 건축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건축조례」 제 35조에서는 1년에 한차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에 따르면 시정명령은¹⁾ 2회로 하며, 이행강제금 계고는²⁾ 1회 실시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행강제금 부과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시정명령과 10일 이상의 계고를 각 1회 실시한 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여야 하며, 고발조치는 원칙적으로 건축법령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위반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최초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2차 시정명령 이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때부터 고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79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와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위반건축물’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 ○○○ 등에서는 ‘위반건축물’을 최초 적발하면 지체없이 시정명령을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위반건축물’임을 표시하고, 2차례 시정명령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시정명령과 10일 이상의 계고를 각 1회 실시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고발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이 완료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삭제하여 건축물 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행정 업무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1)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 기간은 20일 이상 충분히 부여

2) 이행강제금 계고는 10일 이상 충분히 부여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 등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예고를 한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행강제금을 1차 부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표 1]과 같이 2019년 3건(8,955천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1]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2019. 1. 1. ~ 2020. 12. 31.)

(금액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위반건수	처분건수	금액	위반건수	처분건수	금액	위반건수	처분건수	금액
부 과	471	118	305,268	223	53	81,727	248	65	223,541
미부과		3	8,955		3	8,955		-	-

※ ○○○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 ○○○ 등에서는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하였는데도, 2021. 4. 5. 감사일 현재까지 [표 2]과 같이 2019년 4건, 2020년 22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와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위반건축물” 표시를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2019년 6건, 2020년 5건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표시를 삭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표 2]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미표기 및 이행완료후 위반건축물 표기 미삭제 현황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비 고
위반건축물·내용 표기 미조치	합 계	26건	4건	22건	
	○○○	23건	2건	21건	
	○○○	3건	2건	1건	
위반건축물 시정완료후 표기 삭제 미조치	합 계	11건	6건	5건	
	○○○	9건	6건	3건	
	○○○	2건	0건	2건	

※ ○○○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 ○○○에서는 위반건축물을 적발한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데도, [표 3]과 같이 2019년 3건, 2020년 16건은 위반건축물 적발일로부터 최소 4개월이상 장시간 경과한 후, 시정명령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지체되는 등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표 3] 위반건축물 적발일 이후 시정명령 지연 현황(○○○)

연 번	행 위 자	위 치	위반 내용	용도	위반면적 (㎡)	적발일	시정 명령일
1			신축	근생	26.91	19.6.14	20.4.30
2			증축	근생	33.6	19.6.3	19.11.26
3			신축	창고	24	19.8.28	20.1.10
4			증축	근생	65.88	20.2.19	20.6.15
5			증축	근생	267.4	20.2.19	20.6.15
6			증축	근생	16.9	20.2.21	20.6.22
7			증축	근생	3	20.2.21	20.6.22
8			증축	근생	46	20.2.21	20.6.22
9			증축	근생	3	20.2.21	20.6.22
10			증축	근생	8.75	20.2.21	20.6.22
11			증축	근생	30.3	20.2.21	20.6.22
12			증축	근생	7	20.2.21	20.6.22
13			증축	근생	13	20.2.21	20.6.22
14			증축	근생	57.25	20.2.21	20.6.22
15			증축	근생	18	20.2.21	20.6.22
16			증축	근생	27.74	20.2.21	20.6.22
17			증축	근생	71.9	20.2.21	20.6.22
18			신축	근생	42.4	20.2.21	20.6.22
19			신축	공사현장사무소	18	20.5.12	20.9.10

※ ○○○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로 행정절차 이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업무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으며, 적발일로부터 시정명령일 까지 지연된 사항도 특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획적인 점검을 통하여 적발하였으나, 집합건축물임에 따른 위반건축물 각각에 대한 정확한 행위자를 찾아 확인서를 징구함에 있어 지연되었던 점 등의 여러 사안 들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타, 위반건축물 미표기

및 이행완료 후 위반건축물 표기 미삭제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반 건축물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과 교육 등을 통하여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2019년 부과하지 않은 3건 8,955천 원의 이행강제금을 즉시 부과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와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26건과 위반사항의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위반건축물’ 표기와 그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11건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및 당직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당직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닌 예산을 지출하거나, 업무추진비 잔액을 연도말에 몰아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에서는 '20. 12. 21. 당직비와 같은 예산과목으로 편성된 일반수용비 등에서 【표1】과 같이 집행잔액 발생하자, 이를 반납하지 않고 '21년 1월 당직비로 사용하기 위해 13,75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 내에 비치된 금고에 보관 후 회계연도가 경과된 '21년에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

【표1】 '20년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241,200	227,445	13,755	집행잔액 13,755천원 중 13,750천원을 '21. 1월 당직비로 지출, 5천원 반납
당직비	159,600	159,300	300	
일반수용비 등	81,600	68,145	13,455	

출처) ○○○ e-호조시스템 자료 재구성

또한 ○○○ ○○○○○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20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995천원 중 57%인 11,354천원을 【표2】와 같이 12월에 24회에 걸쳐 몰아서 집행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표2】 '20년 12월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출내역	지출금액	지출일자	비고(사용처)
	계	11,354		
1		480	2020-12-09	
2		390	2020-12-11	

연번	지출내역	지출금액	지출일자	비고(사용처)
3		152	2020-12-14	
4		360	2020-12-14	
5		250	2020-12-14	
6		375	2020-12-17	
7		420	2020-12-21	
8		96	2020-12-29	
9		48	2020-12-29	
10		600	2020-12-29	
11		1,260	2020-12-29	
12		3,500	2020-12-29	
13		495	2020-12-29	
14		53	2020-12-29	
15		90	2020-12-29	
16		244	2020-12-29	
17		480	2020-12-29	
18		450	2020-12-29	
19		440	2020-12-29	
20		186	2020-12-29	
21		300	2020-12-29	
22		90	2020-12-29	
23		75	2020-12-29	
24		520	2020-12-30	

출처) ○○○ e-호조시스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예산 집행잔액을 정상적 절차에 따라 반납하지 않고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였으며, ○○○○○에서는 연도말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에서는 업무추진비 및 당직비 집행에 있어 업무처리가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 ① 예산을 집행하면서 해당 회계연도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닌 예산을 지출하고, 업무추진비 잔액을 연도말에 몰아서 사용하여 회계관련 규정을 위반한 실무책임자 ○○○○○ 지방○○○○ ○○○(현 ○○○), 실무책임자 ○○○○○○ 지방○○○○ ○○○(현 ○○○)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아울러 예산 집행 시 회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공장설립 승인신청 처리지연

소 관 기 관 ○ ○ ○

조 치 기 관 ○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표 1】 공장설립 관련 법정민원 처리 지연 현황

민원명	접수일	당초처리기한 (민원 처리기간)	보완 기간	보완 후 처리기한	민원 처리일자	초과 일수	처리 결과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20. 2. 17.	'20. 3. 16.까지 (20일)	'20. 3. 9. ~ 5. 29.	'20. 6. 5.	'20. 8. 5.	43	승인

2. 관계법령(판단근거)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하여 토지관련 법령의 기준·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공장설립 등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민원의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정민원의 처리기한을 넘겨 국민의 권익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 ○○○○○에서는 (주)○○○(대표 ○○○, 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20. 2. 17. ○○○○○ 등의 공장신설 승인 신청함에 따라 '20. 2. 19. 까지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5일이 경과된 같은 해 2. 26.에서야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당초 처리기한인 '20. 3. 16.이 도래되기 5일전인 같은 해 3. 9.에서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재작성' 등의 사유로 민원인에게 같은 해 3. 17.까지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4. 2.까지 처리기한을 부당¹⁾하게 연장하였다.

이에 민원인이 보완에 시일이 소요됨을 사유로 '20. 5. 29.까지 처리기한 연장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로써 ○○○ ○○○ ○○○○○가 '20. 4. 2.까지, 민원인이 같은 해 5. 29.까지 보완을 위해 민원처리기한을 각 1회씩 연장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해 6. 5.까지는 민원처리를 완료하여야 했음에도, 【표 1】과 같이 법정 민원처리기한이 43일 경과된 같은 해 8. 5.에서야 공장신설 승인을 하는 등 법정민원을 부당하게 지연 처리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 ○○○○○에서는 민원처리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의제 처리 문서 재작성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상 높이 미기재에 따른 서류 보완 제출 사항으로 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한이 도래되기 전 미리 민원인에게 구두상으로 연장의견 수렴 후, 연장신청서 제출 전에 민원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처리기한을 선제적으로 연장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항으로 의제처리 및 높이 미기재 사항의 동일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지 않는 사항이라 민원인에게 동일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연장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불편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두상으로 연장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 협의사항으로 새울 시스템상으로만 연장처리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에는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에는 반려 등 신속히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보완요청 기한 7일(3. 9. ~ 3. 17. 주말 제외)을 감안한 처리기한은 '20. 3. 25.까지임

그러나 민원처리기한 연장과 관련된 1회의 공문시행 외에는 구두 또는 내부시스템으로만 보완·연장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총55일에 걸친 보완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법정 처리기한을 43일 초과하여 민원처리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① 조선업계 구조 조정 및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연장된 ○○○에서 고용회복 및 업황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공장설립 승인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감독책임자 ○○○ ○○○○○ 지방○○○○ ○○○(현 ○○○), 실무책임자 ○○○ ○○○○○ 지방○○○○ ○○○(현 ○○○ ○○○○○)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훈계**)

② 특히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공장설립 승인 등 법정민원 지연처리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취득세(도세) 감면업무 처리 소홀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과세전적부심사¹⁾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8조의3 제7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²⁾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등을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해 청구하는 심사
2) 2017. 1.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취득세 감면을 위한 해당 목적 사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2017년 이후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가 추정 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 ○○○에서는 '17. 6. 20. ○○○○ 대표 ○○○(이하 “청구인”라 한다)이 ○○○ ○○○ ○○ ○○○-○○번지 토지 및 건물을 1,404,380,000원에 취득하는데 창업 중소기업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결정세액 66,708,050원의 100분의 75가 감면된 16,150,370원의 취득세를 '17. 7. 10일 부과하면서, 법 개정으로 2017. 1. 1.부터는 취득세 감면을 위한 해당 목적 사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정될 수 있다”라고 잘못 고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20. 8월 ○○○에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 1월 (주)○○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에서는 '20. 8. 25. 기 감면한 취득세 52,843,300원에 지방교육세 4,441,700원, 농어촌 특별세 2,220,850원을 더해 59,505,850원을 추정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당시 고지받았던 2년이 경과하였음을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20. 11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제2020-60호)를 통해 청구인이 ○○○가 '17. 7월 취득세 감면 시 통지한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 1월

부동산을 임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 8월 세무조사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등 59,505,850원을 추징한다고 통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채택” 하였다.

따라서 ○○○ ○○○ ○○○에서 '17. 1월 개정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17. 7월 취득세 부과 시 개정 전 법령대로 토지 의무사용 기간을 2년으로 잘못 안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59,505,850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등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 ① 취득세 부과·감면 등 지방세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실무담당자 ○○○ ○○○ 지방○○○○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5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아울러 지방세 관련 업무 처리 시 법령을 철저히 연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시설부대비(공사감독 피복비)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각 부서에서는 2019. 1. 1. ~ 2020. 12. 31.까지 총 87건, 30,694천원의 예산을 시설부대비(공사감독 피복비)로 집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회계법」 제1조,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401-03)를 현장감독공무원 피복비 등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 준공검사자 및 입회자 등에게는 여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및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공사기간(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공사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필요성), 가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해야 하며 고가의 등산용품 등은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 대리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시설부대비를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기간 내에 현장감독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일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달청을 통하여 우선 구매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고가의 등산복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시설부대비 예산을 본인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이익이 추구되는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 각 부서에서는 2019. 1.1. ~ 2020. 12. 31. 까지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시설부대비를 피복비로 지급하였다.

가. 공사기간 종료 이후 등에 피복비 지급 부적정

○○○ 각부서에서는 [표1]과 같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기간 종료 이후

등에 시설부대비(피복비) 2,642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공사기간 종료 이후 등에 피복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지급일자	공사기간	공사명(요약)	지급금액	지급자		비고
						직급	성명	
총계	9건				2,642			
1	○○○○○	2019.12.23.	2019.11.26.~ 2019.12.15.		200			
2	○○○○○	2019.12.16.	2019.11.25.~ 2019.12.04.		393			용역지급 비대상
3	○○○○○	2020.7.21. (2020.06.18.)	2020.05.18.~ 2020.06.11.		129			실준공 2020.6. 11.
4	○○○○○	2020.12.29. (2020.12.22.)	2020.11.25.~ 2020.12.22. 2020.08.18.~ 2020.12.15. 2020.06.25.~ 2020.11.21.		630			실준공 2020.12. 22. (준공일 구입)
5	○○○○○	2020.12.31.	2020.01.01.~ 2020.09.21. 2020.01.01.~ 2020.10.14. 2020.05.18.~ 2020.06.10		450			
6	○○○○○	2019.07.17.	2019.06.14.~ 2019.06.24		210			
7	○○○○○	2019.12.13. (2020.11.18)	2019.10.28.~ 2019.11.13.		210			
8	○○○○○	2020.10.14. (2020.10.19.)	2020.09.16.~ 2020.10.03.		210			
9	○○○○○	2020.03.31.	2020.02.26.~ 2020.03.24.		210			준공일 구입

나. 공사 준공일 등에 피복비 지급 부적정

○○○ 각 부서에서는 준공일이나 준공 직전일 등에는 시설부대비를 피복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사실상 공사가 종료 직전으로써 현장감독 업무수행을 위한 피복비를 공사감독에게 지급해야 될 합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표2]와 같이 부당하게 시설부대비로 피복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2] 공사 종료 직전에 피복비 부담지급

구분	실과명	지급일자	공사기간	공사명(요약)	지급금액	지급자		비고
						직급	성명	
총계	3건				630			
1 (준공4 일전)	○○○○○	2019.10.07. (2019.10.02.)	2019.07.09.~ 2019.10.06.		210			
2 (준공일 2일전)	○○○○○	2019.07.17. (2020.6.18.)	2019.04.22.~ 2019.06.20.		210			
3 (준공4 일전)	○○○○○	2020.04.16. (2020.03.05.)	2020.02.11.~ 2020.03.09		210			

다. 관내 업체를 통하여 고가의 등산복 구입

○○○ 각 부서에서는 2019. 1. 1. ~ 2020. 12. 31.까지 총 87건, 30,694천원의 예산을 시설부대비(피복비)로 집행하면서 단 1건도 조달청을 통한 우선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시설부대비(피복비)를 관내 등산복판매업체¹⁾ 등을 통해 고가의 등산복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공사기간 종료 이후 등에 피복비를 부담하게 지급한 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 ○○○○○, ○○○○○, ○○○○○ ○○○○○, ○○○ ○○○○○, ○○○ ○○○○○에서는 향후 업무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의 [표1]의 6. 가로수 전정의 경우에는 가로수 전정이 특정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공사기간 종료 직전에 시설부대비를 피복비로 집행한 내역에 대한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하여 ○○○ ○○○○○에서는 ‘○○지구

1) ○○○○, ○○○○, ○○○○, ○○○○, ○○○○ 등

○○○ 관련 사업'의 공사 준공일은 계약 상 2019. 10. 6.이나 일요일이고 실 준공일은 2019. 10. 7.이며 카드결제일이 2019. 10. 2.이므로 준공일과 5일 가량 차이가 나므로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되지만 향후에는 직원교육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① 공사기간 종료 이후 등에 시설부대비를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실무담당자 ○○○○○ 지방○○○○ ○○○(현 ○○○○○), ○○○○○ 지방○○○○ ○○○, ○○○○○ ○○○○○ 지방○○○○ ○○○(현 ○○○○○), 지방○○○○ ○○○, 지방○○○○ ○○○, 지방○○○○ ○○○, 실무책임자 ○○○ ○○○○○ 지방○○○○ ○○○, 실무담당자 ○○○ ○○○○○ 지방○○○○ ○○○, 지방○○○○ ○○○, ○○○ ○○○○○ 지방○○○○ ○○○(현 ○○○○○ ○○○○○), 지방○○○○ ○○○(현 ○○○), ○○○ ○○○○○ 지방○○○○ ○○○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엄중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아울러 시설부대비를 피복비로 집행함에 있어 공사기간을 감안하고 공사감독 피복의 실제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공사 감독에게 피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종료되었거나 준공일이 임박하여 사실상 공사감독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준공일 직전 등에 시설부대비를 피복비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부대비(피복비) 집행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 보

제 목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미이행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 ○○○○○(이하 “○○○○○ 등”이라 한다.)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대지나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그 이행을 위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최초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 표제부(제1호 서식),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제3호 서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제5호 서식) 및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제7호 서식)에 ‘위반건축물’임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시하는 것은 위반건축물임을 알지 못하고 건축물을 매수하거나 분양받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건축물 사용이

제한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최초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시하여 건축물 매수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 등에서는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표 1] 및 [별지]와 같이 71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서도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임을 기재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표 1] 구청별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미표기 현황(2019. 1. 1. ~ 2020. 12. 31.)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비 고
위반건축물·내용 표기 미조치	합 계	71건	11건	60건	
	○○○○○	35건	6건	29건	
	○○○○○	1건	0건	1건	
	○○○○○	34건	5건	29건	
	○○○○○	1건	0건	1건	

출처 : ○○○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 ○○○○○, ○○○, ○○○ ○○○○○에서는 위반건축물 처리에 관하여 업무연찬 등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 ○○○○○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와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71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 요구

제 목 지방하천구역 내 공사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 등 6개 부서에서는 2019. 1. 1. ~ 2020. 12. 31.까지 지방하천구역에서 총 53건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성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를 할 경우에도 하천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서는 「하천법」 제30조와 제33조에 대한 사무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권한은 위임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도 ○○○○○(현, ○○○○○)에서는 2018. 1. 12. ‘지방하천 유지 관리 관련 업무처리 개선계획’¹⁾을 각 시·군에 통보하여 “「하천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남용과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가 처리 되도록 당부한 바 있다.

따라서 ○○○는 지방하천구역 내에서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도와 협의하여야 하고,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 ○○○ 등 4개 부서에서는 지방하천구역 내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기존의 업무를 답습하는 관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도로부터 업무개선계획이 통보(2018.1.12.)된 후 3년 이상 경과 된 감사일 현재까지도 [표 1]과 같이 하천법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이 필요한 공사 18건의 44.4%에 달하는 8건의 공사를 경상남도와의 협의 없이 추진한 사실이 있다.

[표 1] 경상남도 협의 없이 지방하천구역 내 공사를 시행한 내역

구분	공 사 명	지방하천명	시행부서	비고
계	8건			
1	○○천(○○일원)정비공사	○○천	○○○ ○○○	
2	○○천(○○일원)외 ○개소 정비공사	○○천	○○○ ○○○	
3	○○천 정비공사	○○천	○○○ ○○○	

1) ○○○○○-546호

4	○○천 ○○ 및 ○○정비공사	내곡천	○○○ ○○○○○	
5	○○ ○○ 정비공사	신 천	○○○ ○○○○○	
6	○○천 ○○○ 데크정비공사	창원천	○○○ ○○○○○	
7	○○천 ○○○ 설치공사	광려천	○○○○○ ○○○○○	
8	○○천 ○○○ 설치공사	광려천	○○○○○ ○○○○○	

관계기관 의견

○○○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하천법」과 지방하천유지관리 관련 업무처리 개선계획에 따라 경상남도와의 사전협의 후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지방하천 구역 내 하천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인 ○○○도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 보

제 목 법제처 권고 「필수조례」 제·개정 정비 미이행

소 관 기 관 ○ ○ ○

조 치 기 관 ○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 ○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개별법에서도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개선, 주민불편 해소, 부담완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자치

입법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개정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에서는 법제처가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공문으로 통보 받거나, ○○○도 ○○○○○에서 2019. 5. 7. 및 2020. 6. 22. ○○○ ○○○○○에 공문을 통해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²⁾을 공문으로 통보 받은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조례를 제·개정토록 시행하였다.

그런데 ○○○ ○○○○○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3항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개정을 위한 입안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전체 5개 부서에서 총 6개의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 ○○○○○, ○○○○○, ○○○○○에서는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에서는 ○○○○사업 허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의

2) ○○○도 ○○○○○-4328(2019. 5. 3.) 및 -5570호(2020. 6. 22.)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준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례제정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연계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의 설치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방향을 정립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서도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개정 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 ○○○○○○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의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며,

○○○○○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바,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타 시군의 조례제정 현황 및 ○○○의 실정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은

법제처 권고 법령 위임 「필수조례」를 조속히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 보

제 목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허가제 등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2020. 4. 28. ~ 2020. 12. 31. 까지 ○○○○○○○○○ 신축공사 등 10건의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2017년 기준 전체 추락사고 사망자 수 506명의 54.5%에 달하는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9. 4. 11. 제74회

국정현안점검회의를 거쳐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2020. 3. 31.)」이 수립되었으며, 같은 지침에 따라 시공자는 2m이상의 고소작업, 1.5m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구조물공사, 2m이상의 외부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도록 ‘작업허가제’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에서는 「건설안전 혁신방안(‘20. 4. 23. 국무총리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 따라 ○○○○○-3771(2020. 4. 28.)로 민간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작업허가제 시행을 우선 권고하도록 전 시·군에 당부드린 바 있으며,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 개정(2020.12.16.)되어 현재는 건설사업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모두 작업허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승인 통보했어야 하고, 건설공사로 인한 추락사고 사망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따라 작업허가제 도입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작업허가제에 대한 안내나 권고를 통해 건설공사로 인한 추락사고가 예방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안전관리계획 통보절차 소홀

그런데 ○○○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10건의 공사 중 [표1]과 같이 3건의 공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승인 통보하지 않거나 20일이 경과한 이후 승인 통보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안전관리계획 통보 절차 소홀 건

구분	공사명	담당부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일	안전관리계획 통보일	비고
1	○○○○○○공사	○○○○○○ ○○○과	2019.12.23.	미통보	
2	○○○○○○사업	○○○	2020.11.03.	2020.12.31.	20일 경과
3	○○○○○○공사	○○○ ○○○	2019.08.02.	2019.10.14.	20일 경과

나. 공공공사 작업허가제 의무도입 소홀

○○○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10건의 공공공사 중 [표2]와 같이 4건에 대해 작업허가제를 의무 도입하여 시행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구분	공사명	담당부서	공사기간	작업허가제 도입여부	비고
1	○○○○○○○○○○공사	○○○○○ ○○○	2019.05.02.~ 2021.06.17	부	
2	○○○○○○○○○○공사	○○○○○○ ○○○○○○	2019.12.23.~ 2020.10.28.	부	
3	○○○○○○○○○○공사	○○○○○ ○○○○○○	2019.08.02.~ 2021.03.20.	부	
4	○○○○○○○○○○공사 (2단계)	○○○	2019. 12 ~ 2022. 12.	부	

다. 민간공사에 대하여 작업허가제 시행 안내 소홀

○○○ ○○○○○ ○○○○○ 등 6개 부서에서는 2020. 4. 29. ~ 2020. 12. 31.까지 340건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인가·허가 등을 하면서 그 중 23건에 대해서만 작업허가제 시행을 안내(권고)하고 나머지 93.2%, 317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작업허가제 시행을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 ○○○에서는 ○○○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자료에는 안전관리계획을 미통보한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코로나로 인한 공사 중지로 2020. 7. 1. 실 착공이 되면서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통보절차 지연되었고 2020. 8. 20. 승인 통보하였다는 내용의 경위를 설명하였고 작업허가제의 경우 제도도입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작업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에 작업허가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굴착작업과 고소작업 전에 작업허가제에 따라 작업허가를 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공사감독 시에도 이를 작업허가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 ○○○, ○○○○○, ○○○○○ ○○○에는 업무미숙 등에 따라 작업허가제도가 도입된 사실 등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제도를 준수하고 작업허가제도가 정착되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 보

제 목 민원처리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시스템 등으로 신청된 민원을 민원소통과에서 내용에 맞게 분류·접수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면 지정된 담당부서에서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처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가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질의 민원은 14일, 법령 외의 질의민원은 7일, 건의민원은 14일, 고충민원은 7일 ~ 28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는 각종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법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하되, 그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 외 37개 부서에서는 2019. 1. 1.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354건의 민원을 민원 처리기한 보다 최소 2일에서 최대 39일을 넘겨 지연 처리한 바 있고, ○○○ 예산법무담당관 외 21개 부서에서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56건의 민원은 담당 지정을 지연하여 민원처리기한을 2 ~ 12일을 초과하여 민원을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업무 미숙과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부족, 담당자 지정 지연 등으로

민원처리기한을 초과하였고, 추후 관련법의 지속적인 연찬과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소극행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